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276호 1판 (음력 4월 19일)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광주 첨단에 들어선다

〈3지구〉

몸값 1000억원대 슈퍼컴퓨터 도심에 AI기업 전용 입주센터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 국내 최대, 세계 10위권 내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가 들어선다. 몸값만 1000억원대다.

데이터센터 구축 소식에 국내외 AI 관련 대표 기업들이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법인 설립과 사무실 등을 개소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몰려드는 AI기업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충장로 등 도심 내에 20층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신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AI기업들이 도심 내 사무실을 선호해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AI기업 전용 입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최근 기존 건물 몇 곳을 사전 답사했는데, 시설 등이 노후해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집적단지 내에 올 연말께 데이터센터를 착공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00여억원을 들여 완공하는 데이터센터는 실측 성능이 88페타플롭스로 국내에선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시설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지난해 11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슈퍼컴퓨팅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슈퍼컴퓨터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의 서밋(148페타플롭스)이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25.7페타플롭스)이 14위였으며 기상청이 보유한 누리와 미리는 각각 113, 114위였다.

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88페타플롭스는 국내 민간·공공 데이터를 모두 저장해도 절반가량만 차지할 정도로 고성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한결 원활해진 것이다.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집적단지 주요 시설이 될 AI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제 중 하나다.

광주시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려는 AI기업이 광주에 진출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서만 AI 관련 14개 기업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법인설립 또는 사무실 개소에 나서는 등 국내외 AI기업의 광주행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올 상반기에만 광주에서 200명이 넘는 우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기업인 에이모와 데이터 가공 교육을 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에이모는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관련 분야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수별 4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한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에 주석을 달아놓는 작업으로, 에이모에서 8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200만원을 급여를 받으며 재택 근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이 숙련되면 더 높은 단계의 작업에 나서게 되며, 급여도 급상승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산업이 발전하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라벨링 작업도 기술이 숙련되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돌아온 나주환 KIA 내야 안정 발판 ▶18면
동네 책방 나들이 - 책과 생활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더위 피해 걷고싶은 숲길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인 9일, 광주시민의 숲 유아숲 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숲길을 산책하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남북 '불통시대'

북한, 모든 연락채널 차단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등 모든 당국간 연락수단을 당장 끊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실제 이날 오전과 정오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채널에서 모두 남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연락채널 단절은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액션 플랜(행동계획)'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균특회계 2022년 종료…호남 재정 대폭 감소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불균형 시정 못한 지난 3년
㊦광주·전남 미래재정도 암울
㊦재정 분배기준 재설정 시급

과거 정부서 소외된 호남, 산업 기반 열악하고 인구 감소 심각
수도권 수준의 공공서비스 가능하게 지방 중심 재정 분배해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과 3년간의 한시 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남의 재원은 4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부터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낙후도에 가중치 70%를 적용해 지원하면서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에 '단비'같은 역할을 했지만, 지방 이양과 함께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전남, 전북 등에 불이익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구 정체기에 들어간 광주 역시 재정 측면에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3면〉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0여 건의 균특회계 사업 가운데 절반인 20여 건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방세로 보충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4조1031억원)이 2019년(4조708억원)보다 오히려 323억원 감소하고, 지방세는 2019년(1조900억원)에서 2020년(1조8220억원)으로 7320억원이 급증했다.

문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지기반조성, 지방도 정비, 진입도로 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등의 사업 예산을 인구·면적 가중치 30%, 지방소득세·노령인구 비중·재정력 지수 등 지역낙후도 가중치 70%을 적용한 균특회계가 축소되면서 호남의 열악한 재정력이 미래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자체 분석한 결과 균특회계 이양산업 보전예산(3조6000억원) 가운데 2022년까지 수도권은 4300억원(12%), 비수도권 3조1700억원(88%)의 비중을 보였으나 2023년부터 소비지수를 중심으로 배분하면 수도권 1조800억원(30%), 비수도권 2조5200억원(70%)으로 바뀌면서 수도권에 국가예산이 더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에 재정분권 1단계로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기존 11%에서 10%p 인상하면서 8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으나 소비지수 가중치를 우선해 분배하면서 역시 인구가 집중돼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4%p, 2020년 6%p 등을 인상해 균특회계 이양사업 보전 3조6000억원,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금 보전 9000억원, 소비지수 가중치 적용 배분 4조2000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9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지방소비세액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반발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 등은 이 같은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2020년 17조원에서 2023년 20조원, 2030년 3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소비지수 가중치분이 9조원에서 14조원, 21조원 등으로 늘어나며 수도권 점유율만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3년부터 균특회계 이양사업 재정보전 조치가 사라지고, 2029년까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면서 수도권에 국가 재정이 더 쏠리게 된다.

해방 이후 정부의 산업발전정책 및 사업, 각종 국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기반마저 열악한 광주·전남·전북의 재정난이 당장 3년 뒤인 2023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다.

신우진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입장에서 지방에 예산을 나눠주는 인식에서의 재정분권이 아니라 수도권 수준의 공공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하도록 지방 중심의 국가재정 분배가 돼야 한다"며 "특히 전남 등 호남권은 과거 정부 정책에 의해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는 점에서 미래 안정적인 재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